

“美 세이프가드 협상 결렬 시 WTO 제소”

靑, 안보·통상 분리 강조

“한미 안보는 안정궤도…
이해충돌은 다른 논리로”

“결정 때까지 고위급 활동…
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GM 군산공장 폐쇄에 준비…
지역 안정화 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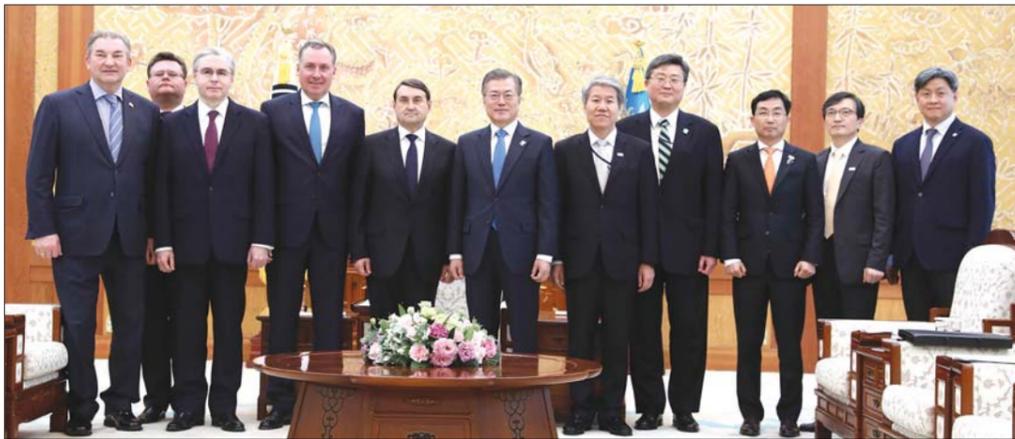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 압력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해서 움직인다는 투트랙(two-track)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세이프 가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낸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3일 선택과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다”며 “단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담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이 될 것이다. 필요 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스타니스라프 포즈드나코프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장 등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러시아 출신 선수단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고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 홍 수석은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4월까지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이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 조치를 중요 협상의제로 설정해놓고 있다”며 “무역규제조치의 실제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엔 WTO 제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

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보와 통상 문제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는 세간 의문에 대해서는 “일종의 투트랙(two track)전략이다.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도 동일하다”면서 “튼튼한 한미간 안보동맹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문제에서는 국익 극대화를 꾀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방침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대화 국면이 북미 대화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통상문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미간 대화, 남북간 대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면서 “현실적으로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들은 다른 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안보와 통상 분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간 교역이나 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해진 제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한미 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같다. 향후 나갈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예단하긴 힘들다. 우리는 법과 제도 한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FTA 폐기설에 대해서는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3차 협상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폐기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 약화와 대량 실업 사태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지역 안정화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매각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대해서는 “아직 GM의 명확한 입장을 보고받지 못했다. GM이 군산공장을 매각할 지 또는 다르게 활용하려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까 싶다”면서 “특히 고용문제가 걸려 있다. GM이 매각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뉴시스

휴일근로 위반시 대체휴일·수당 1.5배 논의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일환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0일 민주당 원내위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검토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토안에는 주휴일 근로를 원천 금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휴일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일 근로를 허용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토안은 고용부가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 작성했고 청와대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국회 찾은 GM사장 “한국서 사업 지속할 것”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은 20일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며 경영상황을 개선해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방안을 위해 자구 계획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배리 앵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를 찾아 여야 원내지도부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기에는 투자 계획은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구조조정 발표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앵글 사장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구체적 지원이나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제돼야 투자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계획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며 “GM은 스스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와의 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앵글 사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완전 철수도 검토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개선해 지속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런 일을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논의를 통해 고루했고, 모두 함께 이뤄 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면담에 앞서 앵글 사장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면담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GM 측에서는 앵글 부사장을 비롯해 맷홀스 GM인턴내셔널 대외정책부사장, 카히카렘 한국지엠 사장, 최종 한국지엠 대외정책부사장이 배석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광주민주화 진상규명’ 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동안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바른미

려당 하태경 의원 등이 각각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개가 계류돼 있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4개의 5.18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국방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5개의 법안을 하

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5.18 특별법은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을 각각 추천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